

“안전사고 책임 떠넘겨”... 택배업계 불공정 계약 적발

공정위, 택배사 과징금 31억 부과
9186건 하도급 계약 전수조사
부당 특약·능장 계약 관행 ‘제동’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5대 대형 택배업체들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안전사고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기는 등 부당한 특약을 맺고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는 ‘갑질 관행’을 일삼다 규제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 씨제이대한통운(CJ),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사업자가 영업점 및 터미널 운영사업자 등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 7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 7억 5900만 원, 한진 6억 9600만 원, 롯데 6억 3300만 원, CJ 6억 1200만 원, 로젠 3억 7800만 원 순

〈5개 택배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관련 현황 및 조치내용〉

/공정위

구분	쿠팡	CJ	롯데	한진	로젠
부당특약 계약건수	1155건	2306건	3609건	1664건	452건
관련 수급사업자수	553개	2175개	1211개	773개	230개
법 위반기간	2022.1~2026.3	2022.4~2026.3	2022.1~2026.3	2021.7~2026.4	2023.12~2026.4
조치내용	시정명령	재발방지명령, 90일 이내 특약조항 수정·삭제 명령* 등			
	과징금	5억6700만원	5억400만원	4억8300만원	5억4600만원

*롯데는 심의일 현재 신규계약서 발급을 완료하여 재발방지명령만 부과

이다.

국내 택배시장은 온라인 쇼핑 일상화와 쿠팡커머스 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2023년 이후 1인당 연간 택배 이용건수가 100건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쟁 속에서 대형 택배사들은 안전사고나 물품 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하고, 기준이 모호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명 기회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설정해 영업점과 택배 종사자들을 압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운영질화와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공정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작업 현장을 불시 점검하면서 시작했다. 공정위는 총 9186건의 계약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5개사는 다양한 형태로 영업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 특약을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일체 전가 ▲행정처분·고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 및 벌금 대납 부담 ▲노

동쟁의(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전가 ▲부동산 담보 설정비용 전액 부담 ▲계약 위반 시 소명 기회나 최고 절차 없는 즉시 계약해지 조항 등이다.

특히 택배사들은 하도급법상의무인 계약서면 발급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총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수행이 시작될 때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최장 761일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심의 과정에서 택배사들은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는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발

급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 받은 수급사업자와 관련 계약 건수가 상당하고, 사업자들 대부분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5개 택배사들은 부당 특약 전면 수정에 들어갔으며, 계약서 미발급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체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를 키워온 것과는 달리 수급사업자와의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해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와 책임에는 미흡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반도체 핵심 공업용수 ‘초순수’ 국산화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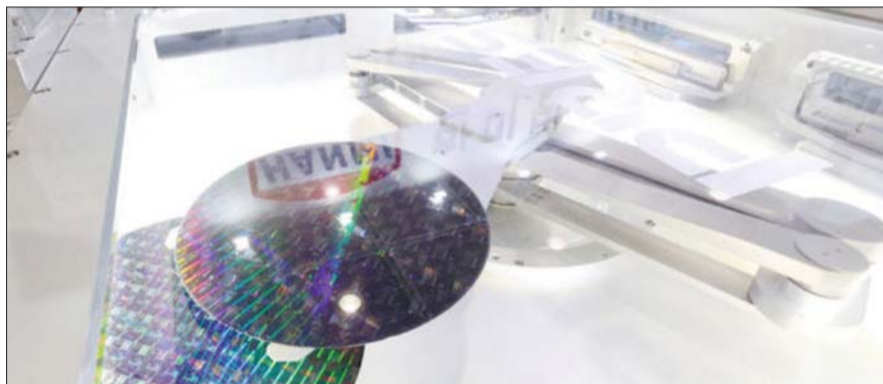
기후부, 초순수 실증설비 기술 이전
SK실트론 제조공정에 처음으로 공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초순수(고순도 공업용수)의 실증설비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했다고 18일 밝혔다.

초순수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데 그간 외국기업의 기술을 사용해 왔다. 수중 불순물을 극미량 수준까지 제거한 물이 초순수다. 반도체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기후부는 이날 경북 SK실트론 구미사업장에서 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성과물인 ‘초순수 실증설비 기술이전’을 위한 성과 활용 협약식을 개최했다.

초순수 생산에는 고난도의 수처리 기술이 요구된다. 수중의 이온물질 농도를 1ppt(1조분의 1) 이하, 용존산소 등 기체 농도를 1ppb(10억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 해외



반도체 웨이퍼

/뉴시스

기업이 생산기술을 주도해 왔다.

기후부는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설비는 초순수 제조의 핵심 공정에 국내 기업이 개발한 주요 장치 및 소재를 적용해 장기간 운영 실적을 확보했다 ▲자외선 산화장치를 통한 유기물 제거

▲탈기막을 활용한 용존산소 제거 ▲이온교환수지를 통한 이온 제거 및 수질 고도화 등이다.

이는 국내 설계 기술로 생산된 초순수가 실제 반도체 제조공정에 공급되는 최초 사례다. 국내 기업의 현장 적용 실적 확보와 함께 초순수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탄소중립 수산과학조사선 ‘탐구2호’ 출항

해수부, 서해 조사 본격화

친환경 수산과학조사선이 서해 운항을 개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9일 인천 서구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친환경 수산과학조사선인 ‘탐구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산과학조사선은 주로 알·치어 및 과학어군 탐지 등을 맡는다. 또 수산자원조사를 비롯해 어장환경 및 적조 모니터링 조사 등을 수행한다.

239톤(t) 규모의 탐구2호 개발·조선에는 151억 원이 투입됐다. 1997년 진수한 기존 조사선(90t) 대비 2.7배 커져 승선 인원도 기존 11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또 연구원 수면 공간을 마련하는 등 승선환경이 개선돼 24시간 운항이 가능해졌다. 선박에는 수중별 수온염분 측정기와 트



친환경 수산과학조사선 ‘탐구2호’

/해수부

롤모니터링 시스템, 과학어군탐지기 등 첨단 조사장비 9종도 탑재됐다. 이 조사선은 서해에서 고품질의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수산자원을 탐색·추적해 조사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특징은 친환경 하이브리드(디젤기관+배터리) 추진기관이라는 것. 입·출항과 조사 수행 시 전기추진 운항이 가능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28일부터 이틀간 aT센터

인공지능(AI)과 로봇, 웨어러블 기술이 장애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를 비약적으로 넓히는 ‘보조공학’ 기술이 대거 공개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오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제21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직업용 보조공학기기 행사인 이번 박람회는 ‘장애인 고용의 미래’를 주제로 6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총 200여 점의 최신 기기와 신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로봇과 AI 관련 전시를 대폭 확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마사회, 장애인 일자리 창출 나선다

장수목장, 직업 훈련 지원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부문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18일 마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마사회 장수목장은 지난 1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장수목장은 목장 내 인프라를 활용해 장애인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육성조련 사회는 장애인 채용과 인사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전북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는 실질적인 취업 연계 및 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장수목장은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말 요양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범으로 운영해 왔다. 이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등과 말 산업 분야 취업



전북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업무 협의를 마쳤다. 장애인들은 현재 매주 수요일 목장을 찾아, 직무를 체험하는 동시에 교육과정 수강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김진갑 장수목장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단순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장애인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말 육성조련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 모델을 확산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운·항만 공기업, 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

부산항만공사, 정보보호 협의회 출범

부산항만공사가 타 지역 항만공사 등과 공동으로 해운·항만 부문 공공기관 정보보호 강화에 나선다.

18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해운·항만 공기업 정보보호 협의회가 출범했다. 지난 15일 부산항만공사 본사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등 3개 기관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참여했다.

이 협의회 발족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기관의 인력과 조직의 한계를 넘어 해운·항만분야의 통합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기존의 단순 정보공유를 넘어, 정보보호분야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전형 협력 모델’을 가동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요 협력 분야는 ▲기관 간 통합 보안 체계 마련 ▲사이버 보안 관련 이슈 공동 대응 ▲합동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교차 점검 ▲정보보호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공격이나 국가 중요시설을 겨냥한 해킹 시도에 대해 ‘워팀’으로서 강력한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발족식에 이어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기관별 정보보호 현황을 공유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공동 실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사이버보안은 개별 기관의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물류 공급망의 지속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협의회 결성이 우리나라 항만 물류 분야의 사이버 보안 면역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